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진미 | 서울대학교

박원호 | 서울대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이슈투표가 정책적 내용과 관련된 합리적 과정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인 정당일체감과 상호작용을 거친다는 점을 보인다. 즉, 유권자가 선호하거나 충성심을 지닌 정당과 그 정당이 선점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슈의 영향력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어느 정당이 선점하고 있는지가 투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호하는 정당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선점한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투표할 확률은 매우 높으나 이슈의 독자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선호하는 정당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불일치하는 경우 정당일체감에 반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존 보수진영이 선점하던 경제성장 이슈를 지키면서도, 진보진영이 독점하고 있던 복지 이슈를 상당 부분 잠식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과 이슈투표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투표결정에 심리적 요인과 합리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했으며, 무당파의 투표결정 요인을 이슈중요도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정당일체감, 이슈투표, 이슈선점, 한국선거, 대통령선거

* 이 연구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No. 2012S1A5A2A03)되었음을 밝히며 안도경, 한규섭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 정례 세미나 참가자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교신저자 박원호(wpark@snu.ac.kr).

I. 서론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학계의 가장 일반적인 합의된 묘사는 그것이 정체성(identity)에 토대를 둔 선택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유권자-후보 출신지역의 동일성에 기반한 지역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학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선거를 예측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¹⁾이나 여야 성향 또한 피아(彼我)를 확인하고 구분하는 유권자 정체성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한국 선거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가능한 균열구조인 세대 또한 그것이 생래적(生來的) 집단에 기초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의 이면에는 정책선거의 부재라는 문제제기가 늘 존재해 왔다. 유권자들이 정책적 내용을 통해 경쟁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적 선거의 이상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Brody and Page 1972). 그러나 현대정치학의 문헌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슈투표는 한국에서 뿐 아니라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도 도달하기 힘든 이상(理想)일지 모른다. 진정한 의미의 이슈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유권자 본인의 정책적 선호도 분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모든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당이나 정치이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Downs 1957).

한국의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정당일체감과 후보자 개인에 대한 호감이 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인들을 압도할 뿐만 아니

1) 정당일체감은 물론 지극히 미국적인 개념이며 정당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한국에서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정당의 술한 명명 및 개명과는 무관하게 '나의 정당'이 무엇인지를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충성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합리적인 정책적 선호와 일정하게 독립되어 나타난다는 점 등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정당일체감이라 부르는 것이 과히 틀리지 않다고 보아,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그대로 쓰기로 한다.

라, 정당과 후보 호감도가 통제된 상태에서 이슈 선호는 투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원호 2013). 요컨대, 투표결정 일반 모형의 가장 주요한 세 가지 요인이라 할 정당, 후보자, 이슈 중에서 이슈에 기반한 투표의 흔적은 매우 미약하며, 이것은 한국 선거를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여전히 색깔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상대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공약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다.²⁾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공약을 고려해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성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전히 이슈에 의한 투표는 후보 선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다. 첫째, 이슈에 대한 검토는 하나가 아닌 복수의 이슈들과 각 이슈들의 개별적인 내용이 모두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다면적인 검토를 전제로 한다. 이곳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 정당이나 후보자 이미지 등 투표 결정에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는 달리 유권자들이 이슈를 통해서 후보자 선택에 이르는 과정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균일(uniform)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무당파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고 얼마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에게는 이슈투표가

2)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에게 투표 결정 요인을 평가(10점 만점)하게 하였을 때, “정책과 공약”은 7.3점, “소속 정당”은 5.8점을 받았다. 한편 동아시아 연구원의 「2012년 대선 패널 조사」에서 응답자의 26%가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반면 7%만이 정당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국의 2012년 18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접전의 양상을 보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이하 민주당)의 양당 대결 구도가 명확했고, 개표까지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우 경쟁적인 선거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작은 영향력을 지닌 요인일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양당 대결 구도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이 상대 정당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견인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슈와 정책이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것은 18대 대선을 새롭게 이해하고 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1. 이론적 논의

이슈투표에 관한 연구는 이슈투표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해 규명하거나 이슈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투표행태의 차이에 관해 살피는 등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이슈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최준영 2009). 이는 유권자가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이 어떻게 투표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살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격적인 메커니즘 논의에 앞서 이슈투표에 관한 논의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후보자들의 입장이 이슈에 대해 차별성이 있으며, 이를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먼저 살피야 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 위치를 나타내는가에 관한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슈에 관해 선호를 형성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적 위치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먼저 유권자들에게 명백하고 차별적인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슈에 있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인데, 특정 이슈를 선점(own)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페트로치크(Petrocik 1996)는

후보자들이 이슈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를 선택해 선거에서 부각함으로써 상대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기서 ‘차별성’이 특정 이슈에 대해 상대 후보와 반드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보자들이 선점하는 이슈들은 반드시 찬반으로 나뉘는 이슈들은 아니며 평화와 같은 유권자 대부분이 긍정 혹은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도 있는 것이다. 이는 스톡스(Stokes 1963)가 제시한 합의쟁점의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그는 찬반이 나뉘는 이슈들을 대립이슈(position issue)로, 유권자들이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갖는 이슈들을 합의이슈(valence issue)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이슈의 구분은 후보자들이 어떻게 이슈를 선점하고 강조하는가와 연결되는데, 정당 및 후보자들은 대립이슈의 경우 동일한 이슈에 대해 특정한 정책적 입장을 선택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만, 합의이슈의 경우 다양한 이슈들의 풀에서 하나의 이슈를 선택하여 강조—혹은 선점—하게 된다. 페트로치크는 후보자들의 이슈선점은 소속 정당의 이미지와 역사에 어울리고, 후보자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슈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들보다는 어떤 후보가 이슈를 더 잘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다수의 유권자들을 무리하게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여겨질 이슈들과 요소들을 강조하며,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은 기존의 정당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보자들 혹은 정당들은 자신들이 유권자들에게 특정 문제들을 보다 더 잘 해결(handle)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를 바라는데, 선거에서 이러한 후보자의 캠페인 활동은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마케팅’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또한 후보자들이 이슈를 선점했을 때 유권자들은 그것을 인지하며 선점된 이슈가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이슈선점의 정도가 명백할수록 유권자들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인지하고 투표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슈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스톡스의 논의를 따랐으며, 이슈영역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은 합의 이슈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이슈태도를 특정 이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유권자가 해당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로 측정하였다.

후보자들이 정책적 위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슈선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이슈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투표 메커니즘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유권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정당일체감이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캠벨 등(Campbell et al. 1960)은 정당일체감을 심리적 정체성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의 강도와 방향이 유권자의 태도와 행동의 주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당일체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요소들을 평가할 단서(cue)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백(Lewis-Beck et al. 2008)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 역시 정당일체감을 심리적 매개변수라고 보고, 투표행태 자체와는 또 다른 태도를 촉발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이슈태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상호작용을 살피고자 한다. 다만 정당일체감은 개념화와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그에 있어서 캠벨 등은 유권자들에게 일체감을 느끼는 정당을 묻고 유권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당에 대한 정체성을 일차원의 연속선상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당일체감의 측정 방법은 캠벨 등의 논의를 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을 묻는 방식으로 정당일체감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이슈투표의 메커니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유권자들이 자신과 정책적 혹은 이념적 입장이 가장 가까운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는 근접 모델(proximity model)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방향성 모델(directional model)이다. 방향성 모델은 대표적으로 라비노위츠 등(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들은 근접모델이 갖는 한계를 비판하고, 이슈투표 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책적 위치뿐 아니라 그 방향성과 강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이슈가 존재하는 영역을 중도를 기준으로 좌우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근접이론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이 유권자 자신과

좌 또는 우의 같은 영역에 있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후보자들에게 투표한다고 보는 반면에, 방향성 이론의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자신의 정책적 입장이 같은 영역에 있을 경우 그 후보를 보다 지지하고, 다른 영역에 있을 경우보다 덜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즉 근접이론과는 달리 유권자는 정책거리가 가까워도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후보보다는, 정책거리가 멀어도 같은 영역에 있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정책거리보다는 그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향성 이론의 주장이다.

또 한 가지 방향성 이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입장의 강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접이론에 있어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얼마나 좌 또는 우에 위치하는지의 정도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필 때 의미 있지만, 방향성 이론에서는 얼마나 극단에 위치하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와 직결된다. 그 강도는 중도적 위치로부터 얼마나 극단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후보자가 강한 정책적 입장을 취할수록 유권자들로부터 그 이슈와 관련된 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 반면 만약 후보자가 해당 이슈에 소극적이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이론의 논의를 수용하여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존재할 경우 그 이슈를 보다 강조하고 선점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그 정도가 낮은 유권자의 경우에도 그 이슈에 침묵하는 후보가 아닌 이슈를 완전하게 선점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만약 두 후보가 하나의 이슈에 있어서 같은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의에 따라 이슈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보다 성공적으로 이슈를 선점한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은 투표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2. 한국의 이슈투표 논의

한국의 이슈투표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합의이슈가 아닌 대립이슈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다. 유권자들이 이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혹은 이슈에

대해 얼마나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정책입장과 투표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송근원 2007; 송근원·정봉성 2007). 김성연 등(김성연·김준석·길정아 2013)은 대립이슈의 논의 연장선에서 근접모델을 적용하여 유권자들이 자신과 정책거리가 가까운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합의이슈에 관한 논의는 유권자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어느 것인지 살피는 정도에서 간접적이고 탐색적인 단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재철 2008). 이에 더 나아가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투표 혹은 정당지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정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권혁용 2008; 우정엽·강충구 2013). 한편, 대립이슈와 합의이슈의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준에서 이슈를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강원택 2010; 이지호 2013) 한국에서는 대체로 회고적/전망적 이슈투표에 관한 연구가(가상준 2008; 강원택 2012; 황아란 2012)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경제투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권혁용 2008; 박경산 1993; 이재철 2008; 정한울·권혁용 2009). 그 밖에 이슈를 구분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이슈들을 유권자들이 투표결정에 얼마나 고려하는지 살핀 연구들이 있다(이현우 2011; 김 욱 2012).

선거에서 정당과 이슈의 영향력에 관한 한국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당의 압도적 영향력과 이슈투표의 미약한 흔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정아(2013)는 유권자의 이슈태도 자체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정당일체감을 통제했을 때 투표결정에 있어서 경제평가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갑윤(2011) 또한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가 정당지지 또는 이념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태진(2000)의 경우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쟁점을 잘 해결할 것 같은 정당의 일치 여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두 정당이 불일치할 경우 정당일체감에 반하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의 분석 결과 두 정당이 불일치하는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선거쟁점들을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정치지식이나 후보자 선호 등에 따라 유권자의 이슈 태도 혹은 이슈투표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있다(장승진 2013; 김

성연·김형국·이상신 2012).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당일체감을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무당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를 이슈 중요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투표결정에 있어서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정당일체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이슈메커니즘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III. 연구 가설 설정 및 변수 조작화

1. 연구 가설 설정

2012년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양자 구도이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유력한 제3후보가 존재해왔던 경향과는 달리 이번 18대 대선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양자 대결 구도가 명확했고, 개표 전까지는 누구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두 후보는 비슷한 정도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지적했듯이 정당일체감이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는 그만큼 양측 후보에게 상대 후보 정당의 지지자들과 무당파 유권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이 중요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선거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유권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당하다는 점³⁾을 고려했을 때,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이 어떤 투표결정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후보자를 선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슈

3)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실시한 '제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를 보면 무당파 유권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79명(34.61%)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마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43명에 달했다. 이 443명은 전체 응답자의 약 20%에 해당한다.

는 이에 대한 매우 유력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보자의 이슈선점과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주어진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후보자가 선점한 이슈가 이미 존재할 때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투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독립변수는 유권자가 특정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이며,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선점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간과한 이슈투표 연구는 이슈투표의 영향력 평가에서 편의(bias)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태도의 상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단기적 이슈선점은 장기적으로 형성된 정당일체감과는 또 다른 투표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독립변수인 정당일체감과 이슈선호가 중첩되거나 상충하는 유권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에 따라 이슈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바꿔 말하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유무 혹은 어떤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후보 선택에 미치는 이슈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당일체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이슈투표 메커니즘의 효과가 다르게 타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 가설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각각의 후보자들이 선점하고 있는 이슈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권자는 정당일체감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슈투표 메커니즘의 대상을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 I’은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와 유권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일치하는 집단, ‘집단 II’는 지지정당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만 있는 집단, ‘집단 III’은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와 유권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불일치하는 집단이다. 본 연구의 가설이 옳다면 이 세 집단은 투표행태가 다를 것이며, 이슈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것이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으로 A정당 후보가 a이슈를 선점하고 B정당 후보가 b이슈를 선점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투표결정 예측을 나타낸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선점한 ‘집단 I’의 경우에는 예측이 간단하다. 이 유권자들은 높은 확률로 지지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표 1〉 A정당 후보가 a이슈를 선점하고 B정당 후보가 b이슈를 선점했을 때의 투표 예측

	a이슈 중요도		b이슈 중요도	
	높음	낮음	높음	낮음
A정당 지지	A정당 후보에게 투표(집단 I)		불확실(집단III)	
무당파 (집단II)	높은 확률로 A정당 후보에게 투표	낮은 확률로 A정당 후보에게 투표	높은 확률로 B정당 후보에게 투표	낮은 확률로 B정당 후보에게 투표
B정당 지지	불확실(집단III)		B정당 후보에게 투표(집단 I)	

집단 I: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일치
 집단 II: 지지하는 정당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만 존재
 집단 III: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불일치

것이다. 따라서 A정당을 지지하면서 a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는 A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며, 반대로 B정당을 지지하면서 b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는 B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하지만 지지정당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단 II’에 해당하는 무당파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에 대한 선호가 없으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따라 투표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들을 정당일체감이 있는 유권자들과 구별하고 이슈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슈중요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A정당 지지자이면서 a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A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하지만 무당파 유권자들은 a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A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A정당 지지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그것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그 대답을 이슈중요도에서 찾고자 한다. 즉, 특정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이론화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a이슈에 대한 이슈중요도가 높은 무당파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무당파 유권자보다 A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 III’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를

선점한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교차압력(cross-pressure)의 상황에 놓인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성향이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슈중요도에 따라 선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당일체감과 이슈의 압력이 교차하면서 두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일부 상쇄되어 버릴 수 있을 것이며, 무당파 유권자들에 비해서 이슈중요도가 투표결정에 미치는 성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리라 예측된다. 위에서 스케치한 내용을 다음의 가설들로 정식화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를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가설 1〉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선점한 이슈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같은 유권자들(집단 I)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이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

〈가설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집단 II)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이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가설 3〉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가 선점한 이슈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들(집단 III)은 무당파 유권자들보다는 이슈의 영향을 덜 받지만 집단 I의 유권자들보다는 이슈의 영향을 더 받는다.

2.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실시한 ‘제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패널에 포함된 표본 크기는 약 2,300명 정도였으며, 최종 패널 유지율은 약 81.9%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주요 변수들을 조작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2012년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자이며 박근혜라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문재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무응답이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여타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는 모두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이슈태도이며, 정당일체감의 경우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무엇인지 묻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없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는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경우 2의 값을,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3의 값을 부여하였다. 통합진보당, 기타,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이슈태도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주요한 사안들 중에서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묻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1위에서 3위까지 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 1위라고 응답한 경우 3점, 2위라고 응답한 경우 2점, 3위라고 응답한 경우 1점, 그리고 1~3위 중 어디에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그 밖의 변수들, 즉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유권자의 이념, 그리고 거주 지역 등을 통제 변수로 고려하였다.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변수 등이 있다.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었고, '10대와 20대'를 1로, '60대 이상'을 5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학, 대졸이상'으로 나누어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소득은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하여 가장 낮은 '100만 원 미만' 구간을 1로, 가장 높은 '1,000만 원 이상' 구간을 11로 코딩하였다. 유권자의 이념은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이념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3차 설문지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진보'인 0점에서부터 '매우 보수'인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서울/인천/경기, 강원/제주, 충청도/대전, 전라도/광주, 경상도/대구/울산/부산' 등 다섯 범주로 나누었다.

IV. 경험적 분석 결과

1. 후보자들의 이슈선점: 보수진영의 진보이슈 공략 시도

앞서 말했듯이 유권자들의 이슈에 기반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보자 간 뚜렷한 이슈선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 제18대 대선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며 경쟁했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어

〈표 2〉 후보자 10대 공약

박근혜	문재인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1 만·나·바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2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3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4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실현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5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평화·번영의 북방경제시대'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 정책 추진	6 범죄·재난·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기업 육성	7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8 혁신경제로 성장 동력 확충, '과학기술·문화강국' 실현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9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10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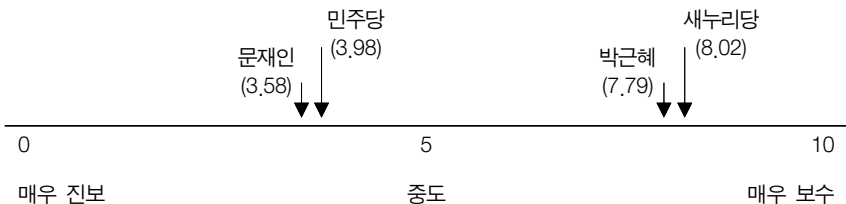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www.nec.go.kr/>)

편 이슈들을 선점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약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보수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첫 번째 공약과 두 번째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주목해볼 만하다. 대체로 복지 이슈는 진보진영의 의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공화당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Layman and Carsey 2002), 공화당은 사적 시장에 공적 자금을 이동시키고 보다 부유한 유권자들을 위해 정책을 구성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Faricy 2011). 페트로치크 등(Petrocik

et al. 2003) 또한 민주당이 선점(own)한 이슈들이 있고, 그 나머지 이슈들을 공화당이 선점한다고 서술하면서 대체로 선거에서 민주당은 사회복지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은 세금, 지출, 그리고 정부의 크기와 관련된 이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였던 보수진영의 이명박 후보는 복지이슈보다는 경제이슈를 보다 강조했다. 강원택(2010)은 제17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의 20대 공약 중 9개 공약이 경제 관련 공약으로 모든 후보들 중 가장 많았으며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었고 그 방향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반면 복지관련 공약은 4개에 그쳤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경제관련 공약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보수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한 사실이며,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진보진영에서 선점해오던 진보의제들에 일부 접근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8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던 경제민주화 이슈의 경우 큰 범주에서 복지이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의제 성격이 진보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김병권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경제적 약자를 돕고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 또한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박근혜 후보를 새누리당에 비해 미약하지만 보다 진보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그림 1>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이념적 위치⁴⁾



관심과 요구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되면서(박원호·안도경·한규섭 2013)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비대위원을 내세워 일찍부터 시장개입 정책에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작은 정부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하였다(세계일보 2012/01/27). 이후 박근혜 후보 경선패권에 김종인이 참여하면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고,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다(연합뉴스 2012/07/04; 동아일보 2012/07/05).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다른 복지 이슈에 있어서도 박근혜 후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혜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복지체계 구축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진보의제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담론을 끌어안고자 시도하였으며(김병권 2012) 이슈를 선점하였다는 평가(이지호 2013)가 이어졌다. 특히 박상운(2013)은 박근혜 후보의 연설을 분석하여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이는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전통적 이미지에 매몰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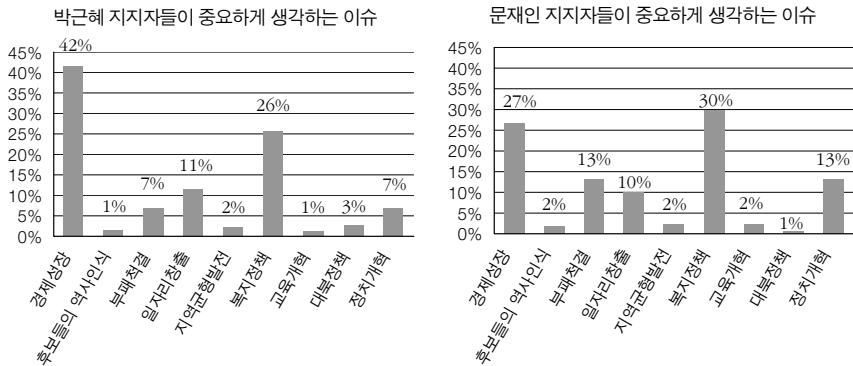
보수진영의 진보의제로의 진출 시도는 진보진영에 있어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었다. 보수진영이 이전부터 선점해오던 경제성장 이슈는 제18대 대선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여전히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였고, 박근혜 후보는 세 번째 공약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워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진보의제의 선점을 시도하면서 기존에 선점해오던 이슈 또한 강조하고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홍식(2013)은 경제성장과 같은 보수담론은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실시한 '제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정당 및 정치인들의 이념을 측정한 결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보수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보다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정치에서 사람들은 보통 진보와 보수를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당, 정치인들 및 귀하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은 매우 진보를 나타내며, 10은 매우 보수를 나타냅니다.'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보수진영의 선점이슈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에 정책 수렴이 발생(김윤철 2013)하면서 진보진영의 차별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두 후보의 차별성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만 찾을 수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뚜렷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각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이곳에서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후보선택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⁵⁾ 이곳에서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이슈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으로 나타났으며,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그림 2〉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⁶⁾



- 5) 여기서 ‘중요하다’고 대답한 유권자에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해당 이슈를 1~3위에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해당 이슈를 1~3위에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는 경우이다. 무응답과 ‘기타’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투표결정에 따른 사후적인 합리화를 배제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한 조사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
- 6) 〈그림 2〉는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실시한 ‘제 18대 대선 온라인 패널조사’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주요한 사안들 중에서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1순위에서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의 문항에 유권자들이 1순위로 응답한 이슈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들은 경제성장 이슈를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복지정책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를 비교해보았을 때 복지 이슈의 경우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 중 약 26퍼센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약 30퍼센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경제성장 이슈의 경우 박근혜 후보의 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 이슈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완전하게 유리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당일체감과 이슈투표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 이슈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이슈투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앞서 구분한 집단별로 이슈중요도의 영향력이 가설과 맞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림 3>은 정당일체감에 따른 이슈중요도의 영향력을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독립변수들을 평균에 고정한 뒤 투표결정 예측확률을 구해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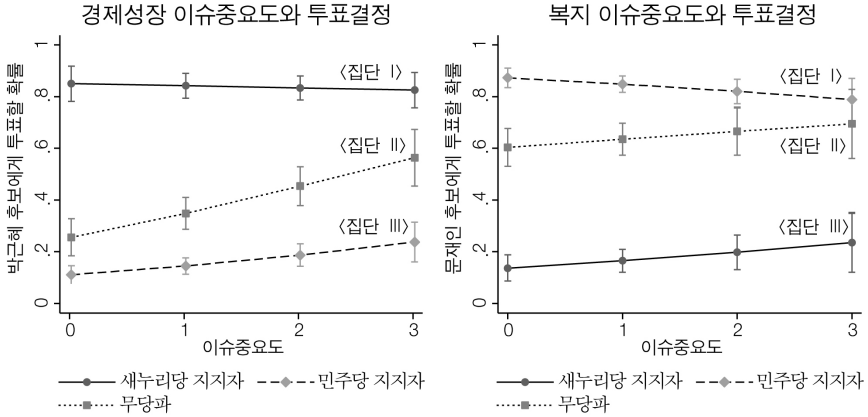
먼저 집단 I 은 새누리당 지지자이면서 경제성장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과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복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인데, <그림 3>을 확인해보면 경제성장 이슈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80퍼센트가 넘는 높은 확률에서 기울기는 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유권자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며, 이슈중요도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이슈의 경우 예측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슈중요도가 증가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폈듯이 복지 이슈선점에서 두 후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즉 문재인 후보가 복지 이슈선점에 실패하고, 박근혜 후보가 복지 이슈를 일정하게 잠식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대 진영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일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는 크지 않지만 이번 선거가 박빙의 양상이었다는 점을

〈표 3〉 정당일체감에 따른 이슈중요도와 투표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정당일체감×이슈중요도 모형	
			경제성장	복지정책
이슈중요도	경제성장		-0.06 (0.13)	
	복지정책			-0.22 (0.14)
정당일체감 (기준: 새누리당)	민주당	-3.36** (0.21)	-3.80** (0.32)	-3.76** (0.28)
	무당파	-2.15** (0.21)	-2.80** (0.33)	-2.26** (0.27)
정당일체감× 이슈중요도 ⁷⁾	민주당		0.36* (0.16)	0.42** (0.18)
	무당파		0.50** (0.17)	0.09 (0.19)
이념 성향		0.56** (0.05)	0.56** (0.05)	0.56** (0.05)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수준	-0.21 (0.11)	-0.23* (0.12)	-0.21* (0.11)
	소득	-0.02 (0.04)	-0.02 (0.04)	-0.02 (0.04)
	성별	-0.21 (0.16)	-0.15 (0.16)	-0.20 (0.16)
	연령	0.18* (0.07)	0.16* (0.07)	0.18* (0.07)
지역 (기준: 서울/인천/ 경기)	강원/제주	0.35 (0.46)	0.45 (0.46)	0.35 (0.47)
	충청도/대전	0.15 (0.28)	0.13 (0.28)	0.15 (0.28)
	전라도/광주	-0.53 (0.33)	-0.62 (0.33)	-0.52 (0.33)
	경상도/대구/ 부산/울산	0.54** (0.18)	0.57** (0.19)	0.52** (0.18)
상수		-0.86 (0.51)	-0.64 (0.55)	-0.63 (0.55)
N		1519	1519	1519
Pseudo R ²		0.48	0.49	0.48

*p<0.05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그림 3〉 이슈중요도와 투표결정



감안하면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이라는 이슈를 완전하게 선점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복지 이슈 또한 문재인 후보와 공유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도 견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II는 무당파 유권자들인데, 대체로 예측한 바와 같은 투표행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무당파 유권자들은 이슈중요도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성장 이슈의 경우 이슈중요도가 증가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를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의 계수값(0.36)보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계수값(0.50)이 더 크고, 두 차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이 이슈

7)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무당파 유권자들 각 집단의 이슈중요도가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기울기)를 계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복지정책
새누리당	-0.06	-0.22
민주당	0.30	0.20
무당파	0.44	-0.13

중요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복지 이슈에 있어서도 무당파 유권자들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이슈중요도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들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민주당 지지자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복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⁸⁾ 이것은 집단 I 에서 나타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와는 상반되는 경향인데, 무당파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과는 달리 복지 이슈를 문재인 후보 선점 이슈로 생각하고 투표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그림 3〉에서 나타나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이슈중요도 증가에 따른 투표확률의 증가가 경제성장 이슈의 경우가 복지 이슈의 경우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선점한 이슈에 있어서 무당파 유권자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견인했고, 복지이슈의 경우에는 두 후보가 모두 일정부분 선점하면서 무당파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이슈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Ⅲ은 새누리당 지지자이면서 복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과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경제성장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인데, 역시 두 이슈 영역 모두에서 예측대로 투표행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제성장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였으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복지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복지 이슈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가 복지 이슈를 선점한 것으로 보고 투표를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당파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I 에서 보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와 반대되는 현상인데, 이것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어느 쪽도 복지 이슈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의 사항으로 유권자들은 이념($p < 0.01$)이 보수적일수록, 연령($p < 0.05$)이

8) 민주당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무당파 유권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차이는 0.34(표준오차 0.17)로 유의하게($p < 0.05$) 나타났다.

높을수록, 그리고 영남지역 유권자들이 보다 더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 변수는 경제성장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수준($p < 0.05$)이 낮을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다.

V. 결론 및 토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슈중요도가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당일체감과 이슈중요도가 일치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가장 작았으며,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 영향력이 가장 컸다. 다만 복지 이슈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 이슈를 박근혜 후보도 일정 부분 선점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기존에 보수진영에서 선점해오던 경제성장 이슈를 지키고, 진보진영에서 선점해오던 복지 이슈를 상당부분 잠식함으로써 경제성장 이슈에서는 무당파의 표를 견인하고, 복지정책 이슈에서는 상대 진영 지지자들의 표를 일부 흡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합리적 투표라 할 수 있는 이슈투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를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요인인 정당일체감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한국 선거에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슈가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차별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선호를 정당일체감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봐야 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정당일체감에 따라 이슈투표 메커니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결정에는 심리적 요인과 합리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심리적 요인과 합리적 요인이 상충하는 경우 교차 압력이 작용하면서 두 요인이 상쇄되어 독립적인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것도 확인했다.

두 번째, 단기적인 이슈선점은 정당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슈의 후보자 간 공유 혹은 분점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복지 이슈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점하는 데 실패하면서 보수진영인 박근혜 후보와 분점 혹은 경쟁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였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이슈선점 연구들이 대체로 후보자들의 이슈선점이 소속정당의 전통과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후보들은 불리할 수 있는 이슈 혹은 상대진영의 이슈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슈선점은 변할 수 있고, 때로는 후보자들 간에 이슈 분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대중매체에서 복지영역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박근혜 후보 당선에 복지 이슈가 영향을 미쳤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인을 규명했다는 것이다.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정당일체감 논의만으로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이 후보자들의 이슈선점과 이슈중요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향후 연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숙고하고 이에 따라 투표하는 민주주의적 이상은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요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슈가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슈들이 정당을 경유하여 재구성되고 구조화되는 순간 시민들의 숙고의 가능성은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슈를 새롭게 정의하고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의 이슈투표와 정책선거는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33-57.
- 강원택. 2010.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19-48. 파주: 나남.
- _____. 2012.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4호, 129-147.
- 권혁용.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투표.”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2』 151-177. 동아시아연구원.
- 길정아. 2013.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권 제1호, 81-108
- 김병권. 2012. “18대 대통령 선거와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황해문화』 76호, 114-132.
- 김성연·김준석·길정아. 2013. “한국유권자들은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167-183.
- 김성연·김형국·이상신. 2012. “한국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최근 설문조사자료에서 나타난 경험적 증거.” 『한국정치연구』 제21권 제3호, 99-126.
- 김 욱. 2012. “정책선거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 평가.”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253-272.
- 김윤철. 2013. “지속과 변화의 관점으로 본 18대 대선의 특징과 의미.” 『황해문화』 78호, 268-281.
- 박경산. 1993.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1호, 185-208.
- 박원호. 2013. “정당일체감의 재구성.”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51-74. 파주: 나남.
- 박원호·안도경·한규섭. 2013.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경제민주화 쟁점에 대한 실험설문: 프레이밍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권 제1호, 1-28.
- 박상운. 2013. “한국의 정당프레이밍에 대한 연구: 18대 대선 정당 후보자들의 연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집 제2호, 187-205.

- 송근원. 2007.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책 이슈에 관한 연구—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집 2호, 239-255.
- 송근원·정봉성. 2007.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입장과 투표행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7집 제1호, 45-70.
- 우정엽·강충구. 2013. “선거이슈와 유권자의 선택.” 박찬욱·김지윤·우정엽 엮음. 『한국 유권자의 선택: 2012 총선』 217-253. 아산정책연구원.
- 윤홍식. 2013. “친복지진영의 18대 대선평가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172호, 40-48.
- 이갑윤. 2011. “후보자 투표와 이슈 투표.” 『한국인의 투표행태』 165-189. 후마니타스.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결정.” 『현대 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11-136.
- 이지호.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이슈가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긍정적·부정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2호, 37-72.
- 이현우. 2011.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 『선거연구』 제1집 제1호, 37-64.
- 장승진. 2013. “경제민주화와 제18대 대선: 쟁점투표(Issue Voting)와 정치지식(Political Knowledge).”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87-112.
- 정태진. 2000. “이슈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슈와 정당동일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한울·권혁용. 2009.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김민전·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3』 205-239. 동아시아연구원.
- 최준영. 2009. “선거 이슈와 투표행태.” 전용주 외. 『투표행태의 이해』. 128-155. 한울 아카데미.
- 황아란.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행태: 긍정적·부정적 정당태도와 회고적·전망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 133-159.
- 『동아일보』, 2012. “새누리 대선공약 핵심은 경제민주화”(7월 5일), <http://news.donga.com/3/all/20120705/47538799/1>(검색일: 2014년 1월 10일).
- 『세계일보』, 2012. “與 ‘경제민주화 실현’ 도입… 재벌 개혁 신호탄”(1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1/27/20120127004117.html>(검색일: 2014년 1월 10일).
- 『연합뉴스』, 2012. “與 대선공약단 첫 회의… ‘경제민주화’가 핵심”(7월 4일),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77700(검색일: 2014년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www.nec.go.kr/>).

-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6, No.2. 450-458.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ley.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ow.
- Faricy, Christopher. 2011.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in America: The Causes and Effects of Indirect versus Direct Social Spending."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3, No.1. 74-83.
- Layman, Geoffrey C., and Thomas M.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6, No.4. 786-802.
- Lewis-Beck, Michael S., William Jacoby, Helmut Norpoth and Herbert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etrocik, John R. 1996.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 1980 Case Stud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0, No.3. 825-850.
- Petrocik, John R., William L. Benoit and Glenn J. Hansen. 2003. "Issue Ownership and Presidential Campaigning, 1952-2000."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8, No.4. 599-626.
-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lain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3, No.1. 93-121.
- Stokes, Donal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7, No.2. 368-377.

투고일: 2014년 1월 21일, 심사일: 2014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1일

ABSTRACT

Issue Ownership and Party Identificatio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JinMi So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Won-ho Park |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Korean voters report policy issues as the most decisive factor they consider in elections, yet the literature on Korean voting behavior show the impact of issues are dwarfed by that of party prefer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the voter's choice is largely influenced by her attitude on issues conditional upon her partisanship and the party's issue ownership.

We find that the Korean voter makes voting decisions based on a delicate interaction between her party identific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she places importance on economic and welfare issues. If the voter has no partisan affiliation, the influence of issue agenda is the highest; the influence of issue importance is weaker among partisans. If a issue a partisan voter cares about is 'owned' by her party she will vote for the party anyway and the net effect of issue importance is minimal; when issue and party do not overlap we find certain effect of such cross-pressure where partisans abandon their partie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we present evidence that Park Geun-hye's issue ownership on economic development attracted independent voters while the promotion of her welfare policies was successful enough to draw some Democrats.

KeyWords | partisan identification, issue voting, issue ownership, Korean elections